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전남서남	061-462-7177
남동공단	070-4756-0119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경기	031-251-7095	포항	054-278-1339
안산/시흥	031-491-7097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02-2636-2148	창원공단	0899-2090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부산/양산	051-637-7433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장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광주	062-453-4012	대전충북	043-236-5077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7년 3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2면 공휴일 유급휴일로, 연차는 자유롭게 / 넷마블을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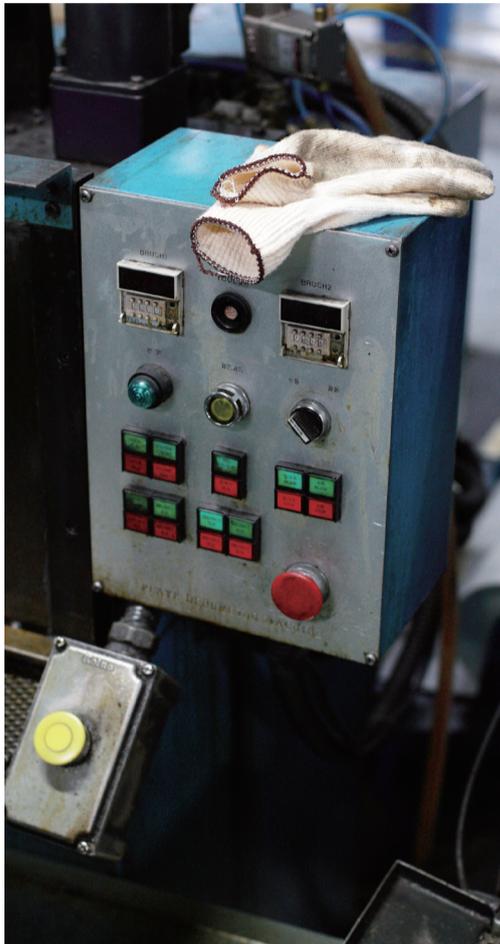
3면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현장의 민주주의로

6면 이주노동 칼럼 / <알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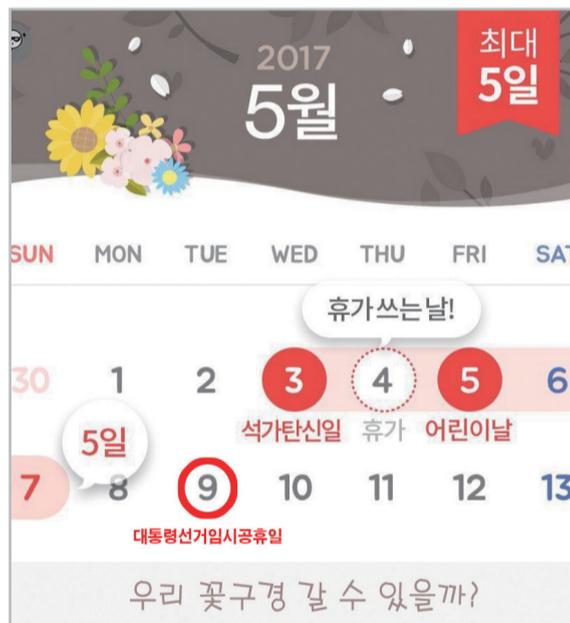
7면 노동안전 칼럼 / 가로세로 낱말 생각하기

8면 칼럼 / 여성 차별과 고통을 생각하는 봄날



“빨간 날은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봄과 함께 시작한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50.3% ‘하루만 쉬어도 생산량, 매출액 등에 타격이 있어 실수 없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32조 3항).’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공단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어떨까. 아직 연차휴가, 연차수당, 대체휴일은 남의 얘기다.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인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님을 활용해 공휴일을 무급화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공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은 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하고 법률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휴일을 무급화 하고 주휴수당까지 삭감하면 결국 노동자는 이를 치 임금이 삭감된 상태로 급여를 받는다.

어느 회사는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고 이 휴일을 일방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다.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 등에 개별서명을 강요한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휴가권이 부당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최근 대체휴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많은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대체휴일에 제대로 쉬는 회사는 많지 않다.

‘자유롭지 않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간 계속 근로한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이고,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작업을 요구하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거나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불황에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도 연차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악용하기도 한다.

노동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 뒤 사업주가 날짜를 지정해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노동자가 회사의 권고대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상급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악용하면서 결국 노동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쓴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너무 많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와 휴업수당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을 짓밟는 사용자들의 관행을 눈감아주고 있다.

기사 2면으로 이어감

“공휴일 유급휴일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 기사 1면에서 이어옴

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차소진, 무급휴가, 무급휴직으로 인한 휴가권의 박탈, 임금 삭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업장은 단체협약 체결 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금속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원 ▲5인 미만 사

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후, 본격 대선국면이다. 봄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일터,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실천이 노동자들의 의지로, 노동조합의 힘으로 시작됐다.

- ◆ **주휴수당**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즉,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
- ◆ **연차휴가** 노동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 마다 연차휴가 일수가 하루씩 추가 된다(25일 한도).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 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신 1년 만근 후 정식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입사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된다.

근무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	25년
연차발생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	25일

넷마블의 장시간·무료노동을 고발한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수당은 받지 못하고...힘들면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해야

2016년 게임산업 개발자들의 돌연사, 자살,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넷마블에서 노동자의 돌연사가 발생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이 노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초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다. 지난 2월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주제로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서울남부지역의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이 토론회에서 <게임개발자연대>와 <노동자 건강연대>가 게임산업 노동자 33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연장근로는 일상

게임산업에 재직 중인 337명의 노동자 중 20대는 27.9%, 30대는 60.0%로 청년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게임산업에서 일한 경력을 묻는 질문에 60.6%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해 젊은 연령에 비해 경력이 짧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8.7%에 달했다.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노동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52시간 초과가 20%를 넘었고, 일상적인 과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60시간 초과 근무한다는 응답도 6.5%인 22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상 대부분 주5일 근무로 돼있고 정한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가 일상적이라는 응답이 37%에 달했다.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수당 없는 무료노동

게임개발자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무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

휴일근로와 휴가 관련 수당, 취업규칙에 명시한 기준 이상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휴가 관련 수당이나 야근 수당을 따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0%, 10%에 불과했다. 장시간 노동이 흔하고 상용직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긴 시간 일하기 때문에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더욱 낮아진다.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뒤에야 고용노동부는 넷마블을 특별근로감독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IT산업은 계속 성장했고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유명하다.

IT와 게임개발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장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요구하고 죽음으로 가는 노동을 멈추려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장시간 무료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신문 1면 상단에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전화의 다이얼을 누르자. 상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들이 나서면 가능하다

대선 주자들 최저임금 1만원 한 목소리...노동자가 법 제도 바꾸는 행동 나서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
 “3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인상할 것.”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5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생산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별 가구원 수는 평균 2.6명에서 3.32명이었다. 가구원 수별 실태생계비는 2인 가구 평균 2,707,573원, 3인 가구 3,437,488원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으로 2인 또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3월15일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사측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등 2017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근혜 씨 파면 이후 본격 대선 일정에 접어들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왜 시급 1만원이어야 할까.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한 걸까. 최저임금에 대해 짚어본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자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네 가지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결정할 때 월 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노동자가 대부분이 미혼 단신이 아닌 복수 구성원이 있는 가구주이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가 2인~3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가구 구성원 2인~3인의 가구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타당성이 있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생산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별 가구원 수는 평균 2.6명에서 3.32명이었다. 가구원 수별 실태생계비는 2인 가구 평균 2,707,573원, 3인 가구 3,437,488원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으로 2인 또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법 제도 바꾸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해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정부 일방추천 공익위원 각 아홉 명씩 모두 스물일곱 명으로 구성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역할은 정부위원 추천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최저임금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요구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리 쟁취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노·사·정이 각각 세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 선거철이 지나면 정치인들이 말을 바꿀 수 있다. 법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되도록 노동자들이 나서자.

당신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바꿀 수 있어 기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2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3월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됐습니다. 어둠을 밝혔던 촛불이, “이게 나라냐”며 광화문광장을 붉게 수놓은 촛불이 승리했습니다.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살지”,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
정말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공부했고, 힘들게 일했고,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 불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헬조선을 만들고, 박근혜-재벌 체제를 수호해온 공범들을 추

불을 들고 하나씩 둘씩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이 왔습니다. 변화의 씨앗을 싹틔웠습니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애썼던 공단노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고.

‘박근혜 없는 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계열사, 하청업체 노조파괴를 저지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처벌받지 않았고, 이재용 삼성 일가는 불법 경영세습을 포기하지 않았고, 박근혜 체제 공범들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임금억제, 쉬운 해고 등 박근혜 표 노동정책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근혜 없는 봄’, 민주주의를 향한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봄별 꽃향기를 맡으며, 승리를 만끽할 때입니다.
내일의 승리를 꿈꿀 때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그 ‘꿈’이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3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폭죽을 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축하하고 있다.

17만 금속노동자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권리, 함께 누려요. 자부심, 함께 느껴요.

노동조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열린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금속관련 산업, 기타 제조업에 일하는 노동자,
가업을 희망하는 노동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철강,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수리서비스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개별가업 노동자까지
280여개 사업장 17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02-2670-9555
서울지부	02-2636-2148~9
인천지부	032-524-7574
경기지부	031-251-7095
포항지부	054-278-1339
충남지부	041-549-4344
대전충북지부	043-236-5077
전북지부	063-243-2009
광주전남지부	062-525-5313
대구지부	053-252-5475~6
경주지부	054-748-3223
구미지부	054-464-0403
경남지부	055-267-1255
부산양산지부	051-637-7433
울산지부	052-265-4961

대통령도 내쫓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상일까요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내쫓았지요.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장? 사장? 이들도 주인이지만 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원인은 우리 노동자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 역시 회사의 주인입니다.

사장 혼자 라인 돌릴 수 있나요? 반장이 슈퍼맨이라 혼자 제품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도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항상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하는데, 그 반대 역시 진실입니다.

주인을 노예 취급하는 회사, 정상이 아닙니다

일하다보면 가끔 내가 노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의 온갖 꼬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때, 짝소리한번 못해보고 오밤중에 일해야 할 때, 특근마저 못해서 속상할 때, 연장수당도 못 받고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노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곳곳에 CCTV가 우리를 감시합니다.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고, '월급 루팡'으로 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돈 버는 회사가 우리를 노예취급, 도둑 취급하는 짓,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비정상, 누가 바로잡을까요

비정상 대통령은 국민이 쫓아냈습니다.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정상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정당한 대접을 박탈당하고 노예 취급받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우리를 주인으로 대접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현장에서 미친개마냥 설쳐대는 관리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맘대로 쓰는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연봉제라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한 푼도 안주면서 밤늦게까지 일시키는 부당노동행위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사 부활할지도 모르는 무료노동도 막아야지요.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한 번 바꿔봅시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초단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만드는 제도 막아야 한다

법무부 일방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다섯 가지 문제점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초단기 계약 이주민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한다. 2017년 2월 법무부는 '201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무부 주도의 3개월 초단기계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을 못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임금통장도 만들 수 없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력 도입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체류자격 부여하는 것일 뿐 도입기준이 불분명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둘째, 노동법 위반, 계약 위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제기하기 어렵다.

초단기계약이주노동자는 한국 실정과 노동법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법 위반, 계약위반, 여성 농업이주노동자에게 만연한 성폭력이 발생해도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노동자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곧 돌려보낼 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셋째, 비닐하우스 숙소, 최저임금 위반, 성폭력, 산재미적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허가제 아래서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환경과 최저임금 위반, 산재 적용 제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최근 몇 년간 사회에 드러났다. 법무부가 확대 실시하려는 계절근로자제도는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넷째, 감시와 통제계획은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가 출국보증각서를 쓰게 하고, 출국 전 담보금을 받도록 권장하며 이탈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공급을

줄이겠다고 한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분증과 임금통장을 압류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금을 묶어두는 식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다섯째, 어업·농업 분야 인력보충을 내세우지만 핵심은 제조업 인력보충이다. 법무부는 '배추 절이는 일'이 농업이고, 멸치건조, 해조류 가공이 어업이라고 한다. 무늬만 어업·농업이지 사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이다. 한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한다는 명분이다. 이러한 초단기 계약직 일자리가 한 번 자리 잡으면 이후 정주노동자들의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조차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향상과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임금을 주는 원칙을 어서 만들어야 한다.

김그루 <이주민과 함께>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2017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전 세계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자!"

3.19.(SUN) 2:00pm 보신각 앞

"인종차별과 혐오 OUT!". "차별금지법 제정!"

- 인종차별 정책을 멈춰라!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종차별 금지하라! / 인종차별 범죄 처벌하라!
- 인종차별, 이주민 탄압 트럼프를 규탄한다!

<행사순서>

1부 기념식 14:00-15:00
개회사/개막공연/발언/퍼포먼스/성명서낭독

2부 기념공연 15:00-15:40
이주민공동체, G-Voice 공연/연대발언

3부 행진 15:40-16:10
보신각-서울고용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마무리)

* 행사장에 별도의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March 21 is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17>

"Let Us Eliminate Racism by the Power of International Solidarity!"

March 19 (Sunday) 14:00 Bo-Sin-Gak, Seoul (Subway line No.1 Jong-Gak Station, exit No.4)

"Racial Discrimination & Hatred OUT!" "Legislate Anti-Discrimination Act!"

- Stop Racism Policy!
- Stop Crackdown &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s!
- Stop EPS!
- Legislat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 Prohibit Racism! / Punish the Crime by Race!
- Impeach Trump Now!

<Program>

Part 1 Ceremony 14:00-15:00
Opening/Opening Show/Speech/Performance/Statement

Part 2 Performance 15:00-15:40
Migrants' Community, G-Voice Performances/Solidarity Speech

Part 3 March 15:40-16:10
Bo-Sin-Gak → Seou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nd)

* Additional events will be held on the sidelines of its main program.

Host by :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 Human Rights,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Vietnam Community in Korea, Solidarity on Legislation for Anti-Discrimination Act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받으면, 검사 비용도 받는다

이미 승인받은 건도 지사에 신청...치료 어려워 예방활동 중요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귀가 멍멍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작업장을 벗어나 시간이 조금 경과한 뒤에 잘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면 청력 회복되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이다. 병원은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른다.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4000Hz) 영역에서 잘 들을 수 없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에 걸린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주변 사람과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하거나, TV를 볼 때 볼륨을 높여서 들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에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 등급을 받는 최소 기준

은 ▲소음 작업장(산재법은 85dB이 기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한쪽의 귀가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한다.

‘3년 이상 근무’라는 기준은 반드시 한 회사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군데 옮겨 다녀도 소음 작업장이면 상관없다. 소음 작업장 여부는 작업 환경측정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청력 손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까지 대부분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 급여는 받았으나 검사 비용은 보장받지 못했다.

최근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검사 비용을 청구했다. 노동자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비용이니 당연히 검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지금까지 검사 비용을 지급한 선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 노동자는 근

로복지공단 본부에 질의를 했다. 질의에 돌아온 답변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험 급여를 청구할 당시 상병 확인을 위해 소요된 진찰 및 검사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이 노동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급했다.

앞으로 소음성 난청 때문에 장해급여를 신청해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검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 검사 비용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가로세로 낱말 생각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가로열쇠

1.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4. 2014년 4월16일 이 배가 침몰하며 304명의 희생되는 비극이 있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6.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8.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함.
11. 청, 황, 적, 백, 흑색 비단을 모아 오행의 방위에 맞게 만든 주머니.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이 주머니 상징물이 사용되었다.
12. 둘 이상의 양이나 문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13.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처우개선, 지위향상 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단체. ex) 전국금속0000.
15.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하거나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불법행위.
16.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2017년 0000은 시간당 6,470원.

◆ 세로열쇠

2. 지급이 밀린 임금.
3.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
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와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35년째 가동 중으로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돼 주민 2,167명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명연장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다.
7.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명작동화.
9. 부부의 서약을 맺는 의식.
10. 청와대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000 동사무소. 매 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후 참가자들이 이곳 앞까지 행진을 했다.
12.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한 법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하는 법.
13.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14. 수사권이 있는 여러 단체가 모여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 설치하여 그 수사의 지휘를 관장하는 곳.
15. 토목 기계의 하나로 땅을 다지거나, 지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 도로 공사 등에 널리 쓰이는 중장비.

여성 차별과 고통을 생각하는 봄날

[칼럼]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에 돌아 본 우리 곁의 차별

“세상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나치의 강제수용소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적어나갈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 하지만 오랜 역사동안 우주의 중심이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성 임금차별’입니다.

지난 3월8일은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09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선거권, 노동조합 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매년 3월8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5년부터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성계가 정부와 회사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다시 말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임금을 1/3이상 적게 받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라”였습니다.

한국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35개 국가 중 자살, 노인빈곤 등 여러 부문에서 불명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이 100원이라는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4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쓰고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은 법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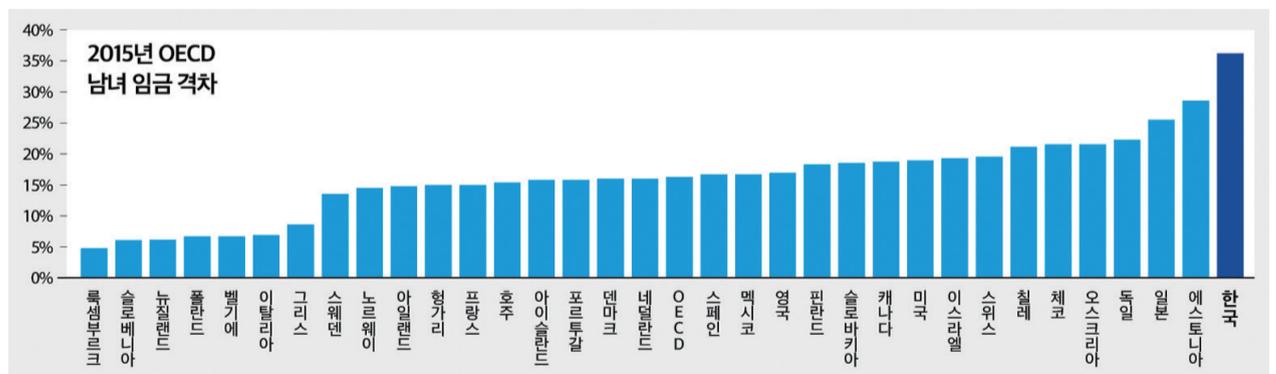
올해 3.8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자신이 면접 때 경험한



민주노총이 3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109주년 세계여성의 날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남녀 임금차별을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면접관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남성들은 돈을 쓸데가 더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여성들이 돈 쓸데가 더 많죠.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해도 여성이 더 비싸고, 속옷만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개를 사 입어야 하는데.”

나이가 55세 이후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임금피크제로 낮추려는 시도,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일의 양과 능력, 즉 노동력은 다르지 않음에도 쥐꼬리만 한 임금을 주기 싫어 또 다른 하위계층의 노동자를 만드는 기업의 논리, 이것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성소비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이 노동자의 녀살 좋은 성토에 이야기를 들던 노동자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속은 참 쓰렸습니다. 남녀 임금격차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의 딸, 마트 노동자인 엄마, 아내의 이야기이자, 나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고,

꽃피는 봄이 오면 회사마다 체육행사를 합니다. 회사는 체육행사의 흥을 돋운다는 이유로 소위 여성도우미를 부릅니다. 이런 행사에서 여성들을 흥을 돋우는 존재, 즉 도우미로 소비하는 현상이 이제 꽤 익숙해졌습니다. “직장동료 남성 두 명과 노래방에 간 적이 있어요. 노래를 한 두 곡 불렀

는데 여성 도우미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분도 여성인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기 들끼리 노는 것도 아니고, 여성인 내가 있는데 어떻게 도우미를 불렀을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짝을 맞추려고 도우미를 부른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직장동료가 아닌, 그저 남성의 파트너였던 거지요.” 슬픈 현실입니다.

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에 여성의 서비스에 기댄 유흥업소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성의 성을 특정화해서 소비하고 향유하는 행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양해야 한다고 얘기 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성을 ‘존중’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상품화한 유흥에 대해 우리 모두 불편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박근혜가 3월10일 파면된 이후 광장에 “이제 적폐청산이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적폐라

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나옵니다. 박근혜 없는 봄이 왔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세상의 절반인 여성,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인 여성이 겪는 차별과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는 봄날입니다.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여성위원장